

“이재명 대통령, 내란세력 응징·사회대개혁 나서야”

비상행동 ‘협력 정치 실현’ 촉구
재단, 오월정신 헌법 명문화 기대
신군부 세력 비자금 환수 수사도
환경단체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자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분출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12·3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6개월 만으로, 내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다시는 내란이 불가능한 법·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물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186개 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정부는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광주시민은 83.9%의 높은 투표율과 84.7%의 지지로 내란세력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드러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재구속, 내란 주요 종사들에 대한 구속 수사, 내란 특검 등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과 정당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결선투표제, 비례대표제의 전면화를 통해 정치 다양성을 확대하고 협력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대개혁을 통해 승자독식 경제체제가 강요하고 있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헌과 사회대개혁은 내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한 광장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광장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과 사회대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과 사회대개혁 논의를 진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기념재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환수 등을 요구했다.

재단은 “5·18 진실이 왜곡되고 그 숭고한 정신이 일부 세력에 의해 폄하되지 않도록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며 “특히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불법 은닉한 재산을 아무런 제재없이 후손에게 이전된다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것과 다



광주비상행동이 4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에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후속조치를 위해 정부에 제시한 11개의 권고안을 이행해야한다”며 “또 수십년간 국가적 예우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18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예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환경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문제인 정부의 환경정책 한계와 실

천 부족을 반면교사로 삼고, 윤석열 정부 시기의 환경 역행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환경정책의 총체적 후퇴기였다”며 “설악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건설과 새만금·가덕도신공항 등은 생태계 파괴와 탄소배출을 동반한 대표적인 반환경 정책으로 이러한 과거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단순한 원상 복구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며 “기후정책은 더 이상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통합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환경회의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4개 단체로 구성됐다.

최환준·이수민 기자

이정선 시교육감 “지방교육 자율·창의성 존중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인 선거였다”며 “새 정부가 국민 통합과 함께 회복과 성장, 행복한 대한

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교육공동체 또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고 학생의 꿈과 실력이 성장하며, 모든 교육 구성원이 행복한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확대,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다양한 실력으로 미래를 여는 교육,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광주정신으로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새 정부 출범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최환준 기자

문인 복구청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기대”

문인 광주 복구청장이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소회를 담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문 청장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 모진 삭풍과 눈서리에도 꺾이지 않은 당신의 신념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공으로 지낸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씨름하던 청년기, 인권 변호사를 거쳐 기초·

광역단체장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지내면서 겪은 수많은 정치적 시련 속에서도 당신은 항상 흔들리지 않았다”며 “때로는 외롭고 고된 싸움이었지만 늘 약자의 편에 서었다”고 말했다.

또한 “12·3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앞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과 형광봉을 들고 외친 국민들의 함성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행복하게 다가왔다”며 “4개월 넘게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로 향했던 제 발걸음도 고단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소신으로 버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청장은 “그 누구보다 민초들의 고충을 잘 아는 대통령으로서 항상 국민과 함께해주시리라 굳게 믿는다”며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염원이 대한민국 주권자를 다시 나라의 주인으로 세웠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경찰, 대선 선거법 위반 4건 수사 본격 착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지난 3일 광주 지역에서는 선거 관리 부실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4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본 투표 당일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선거사범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경찰청은 4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일 오후 4시 4분께 서구 금호1동 한 투표소를 찾은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투표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와 성명이 같은 B씨가 다른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 A씨의 이름으로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는 선거 사무원이 투표 전 유권자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께 북구 두암동의 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80대 치매 환자 C씨가 재투표를 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C씨는 두 차례 더 투표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7시께 동구 지산1동 투표소에서는 기표

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10대 유권자가 현장에 있는 선거 사무원에게 적발됐다.

해당 유권자는 “첫 투표라 신기해서 기표용지를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 15분께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 D씨(68·여)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D씨(68)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관리원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다.

투표관리원은 선거 관리 규정상 투표용지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D씨에게 전달했으나 현장에서 기표 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오전 7시 10분께 동구 지산1동 투표소에서 E씨(65·여)도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용지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형사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쌍촌동 (4층건물) 매매

상가 주택

월수익 520만
보증금 6천만

▶ 원가 급매

13억
9억8천만

장성토지 (담양)



① 장성 토지
장성담 5분, 1필지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240평, 분할 가능)

② 담양 전원토지
창평중 5분 / 전기,수도 완비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 유흥기능 (룸,노래홀,홀덤펀)
▶ 6층 (전용 60평)

(보2천,월수익 250만)

시세 8억
급매 4억 (용3억3천)

법원 경매

★ 경매 관심 있는 분
★ 기초 부터 ~
실전까지

특수 전문
(유치권, 법지)

010-6670-9800

062-382-5500